'속빈 강정' 한심한 광주군공항법, 대구 수준으로 개정해야



대구 군공항 부지에 포함돼 이주해야 하는 주민은 이주정착특별지원금(세대당 2000만원), 생활안정특별지원금(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광주군공항특별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 대구 신공항 이전 부지 전경.군위군 대구경북신공항 예정지.

매일신문 제공)

같은 날 제정됐지만 너무도 다른 광주·대구 군공항특별법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지역 현안 논의 주도하지 못하고 타지역 법 무리하게 뒤쫓아 제정했다 지자체간 마찰만 키워

광주군 공항 현안을 두고 광주와 무안·전남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광주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 부터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 한참 미치지 못한 광주군공항이전법을 제정하면서 지자체간 마찰만 키운 것 아니냐는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지역 중요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관련 법·제도 마련에도 소홀하면서 뒤늦게 타 지역의 법·제도를 무리하게 뒤쫓아제정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광주군공항이전법을 따를 경우 대규모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도시로 개발할 수밖에 없어 광주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100만평숲 조성', 광주 경제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반도체·AI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등이 법 개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군공항이전법에 국가 책임 명시해야"=대 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는 이 법률의 주무부처를 국 토교통부(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국방 부(이전총괄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제3 조에 '기본 방향'을 명시했다. 통합신공항을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여객·물류 중심의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으로 건설하고, 이 사업을통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국토의 균형 발전,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관광·상업·산업 등의 기능이 활성화된 도시 조성 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했다. 광주군공항이전법에는 여기서 '국가'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로만 해놨다. 광주시 책임으로 재원조달계획을 세워 추진하라는의미다

또 제7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서 광주군공항이전법에는 없는 조항들을 넣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전주변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해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같은 군 공항 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의 경우 지원근거를 명시한 반면 광주군공항이전법에는 이를 미반영한 것으로 명확한 차별적 조항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제4조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에 따르면 전업을 희망하는 이주자의 경우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전업 미희망 이주자는 농업에 필요한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 교육을 해줄 수 있다. 또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을 세대당2000만원,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씩 지급해준다.

◇광주 군·민간공항 동시 이전 추진, 법도 개정해 이=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 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 군·민간공항이 동시에 무안국제공항에 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광주군공항이전법도 대구 경북통합신공항법에 준하여 민간공항까지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법률에 담아 국토교통부가 국방부와함께 군·민간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는 제12조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을 두게 하고, 제13조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를 통하여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로 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누구보다도 대화와 소통을 촉진하고, 광주와 전남이 함께 승리하는 해법을 찾아 중앙 정치 무대에서 광주와 전남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비판한다"며 "공항이전문제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 의제라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서로 마주 보는 일조차 외면하며, '남의집 불구경하는 듯'하는 것이라면, 이는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민의를 심각하게 거스르는 일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난 광주의 자식, 호남은 혁신당의 부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인터뷰

"민주당과 협력해 윤정권 대응 선거 다양한 선택지 만들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나는 정치적으로 '광주의 자식'이고, 광주와 호남은 정치적으로 혁신당을 낳아준 부모"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조국혁신당 대표 실에서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싸우는 것 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 정권 재창출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나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제일 싫 은 사람이 조국이다"고 밝혔다. 또 광주·전남 지 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민주당과의 협력 을 통해 윤 정권에 대응하며, 향후 각종 선거에 서도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 치적 선택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호남 재선거에 대한 총평은?

▲호남은 민주당이 사실상 집권당이다. 하지만 정치적 네트워크가 없으면 지방선거 공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혁신당은 지역구 선거 경험이 전혀 없기때문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경험을 해봐야 했다. 이번 경험이 향후 선거에서 많은 도움이 될듯하다. 가장 큰 수확은 광주·전남 지역민의 성원이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 들어오면서 민주당이 역설적으로 혁신될 것이다.

-호남에서의 한 달 살이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지역민과 매일 식사를 같이 했다. 지역민은 이번 재선거를 통해 "영광·곡성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고 좋아하셨다. 각 당의 당 대표가 많게는 4차례 선거구를 돌았고, 각 당 지도부와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 목소리를 들었다. 지역민은 "경쟁 잘했으면 좋겠다. 비교 선택지가 생겨서 좋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특히지역민들은 이번 재선거가 지역 정치와 지역행정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점을 바로알고 있었다. 민주당도 앞으로 조심할 것이다.

-지방정치 혁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호남의 경우,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되니 공
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지역은 본선에
서 많이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지자체가 투명성
을 높이는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하고 있다. 이번
호남 재선거를 통해 '조국혁신당표' 지방정치 모
델을 보여주려고 했다. 향후 '조국혁신당표'를
실천할 수 있는 지방단체장이 나오고 운영되면
이 모델은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할 것이다.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은?



▲민주당이 집권 당인 호남이 조국혁 신당을 비례 1위로 만들어 줬다. 한 달 짜리 정당과 70년 정당인민주당을반 반 지지해 준 것이 다. 호남이 (혁신당 이라는) 자식을 하 나 더 낳아 키운 것

이다. 오래된 '나이 든 장남'이 있는데 여러가 지 이유로 혁신당이라는 정치적 자식을 하나 더 만든 것이다. 그래서 호남은 혁신당의 정치 적 부모이다. 법안 통과와 정책 실천을 위해서 도 민주당과 협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 교체 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바뀔 일은 없다.

-혁신당이 지역 기반을 잡는 게 힘들 것이라 는 지적도 나오는데?

▲조직강화특위를 만들었고 본격 시동을 걸었다. 재·보궐 선거 이후 지역 책임자를 전국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내년 4월까지 100~150개지역위원회를 만드는 게 목표이다. 세종, 충북, 제주, 경북 4곳도 창당 준비가 마무리 단계이며, 시·도당 위원장도 선임 중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도 각 지역에서 지역의회의원들이 입당을 하기도 했다. 기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정치인도 입당을 하지만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면서 진용을 갖출 것이다.

-다음 지방선거 호남 전지역에 후보를 낼 것

▲당연하다. 하지만 무작위로 후보를 낼 생각은 없다. 내년 재·보궐 선거 지역이 결정되면, 먼저 선거구와 인력풀을 조사하고 혁신당의 조 직적 역량을 고려해 취사선택한 뒤 결정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자치단체장도 중요하지만 광역시·도의회와 기초의회를 겨냥해 지역 청년 정치인을 대거 발굴해 훈련을 시키고 싶다.

-조국에게 '광주'와 '호남'의 정치적 의미? ▲82학번으로 대학에 들어갔을 때 가장 충격받은 일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사진을 몰래 돌려봤을 때이다. 광주에서 시민에 대한학살 진압이 이뤄졌는데 대학 입학 전까지 이를 몰랐고, 조선일보의 '폭도진압' 보도를 본아버님은 "이건 이상하다"는 말씀을 하시기도했다. 그때부터 이런저런 학생 운동에 관여했고, 광주도 직접 찾아갔다. 저는 정치적으로 '광주의 자식'이고, 광주에 대한 부채감으로 청년 대학시절을 시작했다. 광주에 대한 부채감이 컸다. 이 부채감이 대학원에 가고, 학자가되고, 진보적·비판적 지식인의 길을 걸었던 동력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